



환경부

보 도 자 료

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
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

보도 일시	2022. 12. 8.(목) 12:00	배포 일시	2022. 12. 6.(화)
담당 부서	환경보건국 화학물질정책과	책임자	과 장 신건일 (044-201-6770)
		담당자	수석전문관 강미진 (044-201-6784)

민관이 함께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안 마련

- ‘급성, 만성, 생태’ 유해성에 따라 화학물질 관리 차등화 -

□ 환경부(장관 한화진)는 12월 8일 영상회의(정부서울청사↔정부세종청사)로 열린 제1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유독물질*의 유해성에 따라 관리형태와 수준을 차등화하는 내용으로 ‘유독물질 지정관리 체계’ 개편안을 보고한다.

* ‘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’에 따라 고시한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과산화나트륨 등 1,093종이 있음(2022.11.30. 기준)

□ 이번 개편안은 2015년 1월 ‘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(이하 화평법)’ 시행 이후 사회적 규제 부담 증가*에 대응하고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.

* 연평균 유독물 신규지정 약 3배 증가(연 16→ 50종): ‘14년 722종 → ‘21년 1,082종

○ 그간 산업계는 화학사고 시 즉시 피해를 유발하는 급성유해성물질(염산 등)과 소량의 낮은 농도라도 장시간 노출 시 암과 같이 점진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만성유해성물질(납 등)을 같은 수준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개선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.

○ 또한,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이 유독물질로 지정될 경우, 사업장과 동일한 수준의 화학규제가 적용될 수 있어 불편이 따른다는 측면도 있었다.

* 벤젠(0.1% 이상 혼합물), 차아염소산나트륨(2.5% 이상 혼합물)이 유독물질로 지정되면, 휘발유(벤젠 0.7%) 및 락스(차아염소산나트륨 4~5%)도 유독

물질에 해당하여 국민들이 해당물질을 사용 시 개인보호장구 착용 등 ‘화학물질관리법’ 적용 대상이 됨

□ 이에, 환경부는 지난해 5월부터 시민사회, 산업계, 정부 관계자 및 전문가 등과 함께 ‘화학안전정책포럼’을 운영하면서 개선방향을 논의하여 합리적인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.

○ 지난해 화학안전정책포럼에서 유독물질 취급사업장의 차등관리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했으며, 올해 환경부는 연구용역*과 총 12차례의 설명회, 간담회 및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.

* ‘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안 마련’ (’22.3. ~ 8월, 인하대)

※ ‘화학안전정책포럼’을 통한 토론내용 등은 누리집(www.chemnavi.or.kr/forum)에 공개

○ 이를 통해 유독물질의 유해성*에 따라 화학사고 예방·대응관리 및 인체·환경 노출 최소화 등에 집중할 수 있도록 취급시설 관리, 취급자 및 영업자에 대한 관리를 차등화하는 개편안을 도출했다.

* 「화평법 시행령」 별표1에 규정된 유독물질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유해성

□ 이번 개편안은 ‘국민안전 확보’, ‘합리적 규제 적용’, ‘소통 강화’의 원칙에 따라 마련했으며, 주요 개편 방향은 다음과 같다.

○ 첫째, 지정체계는 ‘유독물질’로만 지정하던 것을 인체·환경 영향 및 급성·만성에 따라 ‘급성유해성’, ‘만성유해성’, ‘생태유해성’ 물질로 구별하여 지정한다.

○ 둘째, 관리체계는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, 취급량 등을 고려하여 ‘화학물질관리법(이하 화관법)’에 따른 영업허가, 취급시설 기준 등 관리 수단별로 차등화한다.

- 고농도 염산 등 급성유해성 물질은 노출 즉시 인체 피해를 감안하여 현재와 같이 취급량, 확산가능성을 고려한 사고 예방 및 대응 중심으로 촘촘하게 관리한다.

- 저농도 납 등 만성유해성 물질은 소량이라도 장기간 노출 시 인체 피해발생 우려를 고려하여 인체 노출 저감을 중심으로 관리한다.
- 산화구리 등 생태유해성물질은 사고 시 수생생물 피해를 감안하여 수계 유입 및 토양침투 차단 등 환경 배출의 최소화(방류벽, 집수 시설, 바닥 방수 등)에 집중하여 관리한다.

□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안에서 ‘화관법’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○ 영업신고제도를 도입하여 저유해성, 소량 취급자를 관리하되, 극소량 이하를 취급하여 화학사고 시 사업장 외부로 미치는 영향이 낮은 경우는 영업허가·신고를 면제한다.

○ 정기검사 주기는 현재 영업자 여부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하던 것을 유해성, 취급량 및 위험도*에 따라 1년부터 4년의 범위에서 다르게 적용하고, 극소량 이하 취급사업장은 자율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.

* 화학사고 발생 시 영향범위와 사고 발생가능성을 모두 고려하여 산정한 위험수준을 말하며, 현재 ‘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’ 검토 결과에 따라 부여됨

○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은 유해·위험성 분류에 대한 국제기준(UN GHS)에서 정한 유해·위험성별 안전문구를 준용하는 등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룬다.

□ 한편, 환경부는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급성유해성 물질 지정대상을 확대하고, 만성유해성물질 관리 이행안(로드맵) 마련을 추진한다.

○ 급성유해성 지정기준을 강화하여 피부 부식성 물질의 경우 구분 1A만 유독물질로 지정하던 것을 구분 1B 및 1C까지 확대하고, 특정표적장기독성(1회 노출 구분1)도 지정대상에 새롭게 포함한다.

○ 만성유해성물질 관리 이행안(로드맵) 마련 시 사업장 주변 환경 및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취급 중 배출관리 방안과 화학물질을 용도별로 사용하는 경우 소비자에 대한 위해도를 저감할 수 있도록 노출 최소화를 위한 관리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.

- 환경부는 이번 개편안에 따라 내년 8월까지 ‘화평법’과 ‘화관법’ 개정안 및 관련 하위법령안에 대한 개정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.
- 유독물질 지정기준, 취급시설기준, 취급기준 및 영업신고 요건 등 하위법령에서 정해야 할 세부적인 사항은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화학안전정책포럼을 통해 충분히 논의할 예정이다.
- 신건일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은 “이번 개편안은 국민안전과 현장 수용성을 모두 담보하기 위해 시민사회, 산업계 및 전문가가 정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마련한 것”이라며, “안전은 담보하면서 현장 적용성을 높인 제도 마련을 위해 법률 개정뿐만 아니라 하위법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도 사회 각계 각층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을 받을 예정”이라고 말했다.

- 붙임 1.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안 요약.
2. 전문용어 설명. 끝.

담당 부서 <총괄>	환경보건국 화학물질정책과	책임자	과 장 신건일 (044-201-6770)
		담당자	수석전문관 강미진 (044-201-6784)
	환경보건국 화학안전과	책임자	과 장 이형섭 (044-201-6831)
		담당자	공업전문관 최재석 (044-201-6840)

붙임 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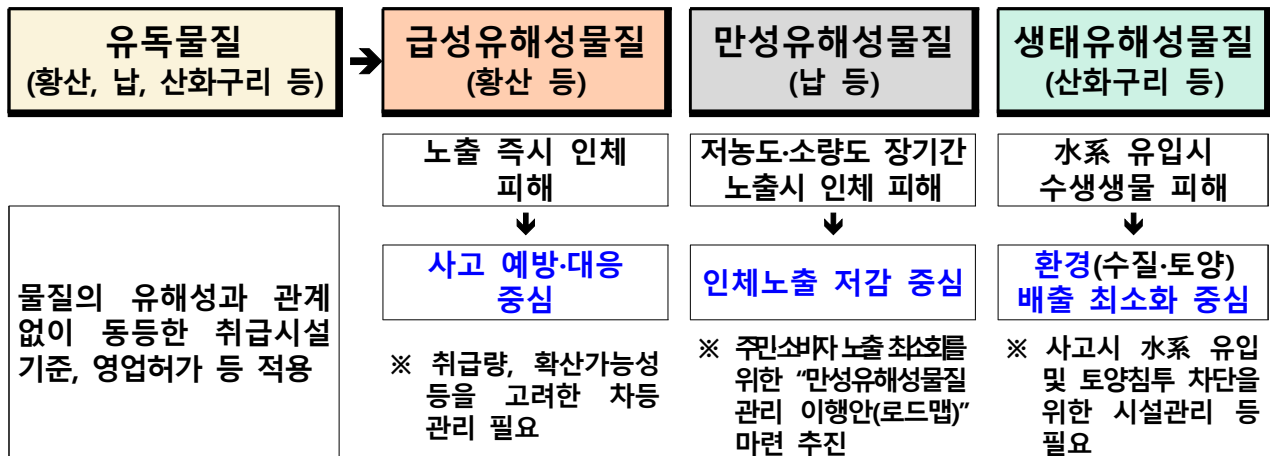
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안 요약

□ [기본방향] 유해성, 취급량 등에 따른 위험을 고려하여 개편

- (지정체계) 유해성에 따라 급성·만성·생태 유해성 물질 구별 지정
- (관리체계) 화학사고 예방·대응, 인체 및 환경노출 등 고려 체계 개편

< 현행 >

< 개편 방향 >



□ 지정기준(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령) 개편방향

<유독물질 지정기준의 세분화 및 조정(안)>

현행 지정기준		개정 지정기준(안)	
유독물질	가~다. 급성(경구·경피·흡입)독성(구분1~3),	<u>급성 유해성</u>	급성(경구·경피·흡입)독성(구분1~3)
	라. 피부부식성(구분1A),	(가~라)	피부부식성(구분1A·B·C),
	마. 수생환경유해성 급성(구분1)		<u>특정표적장기독성-1회노출(구분1)),</u>
	바. 수생환경유해성 만성(구분1)	→ <u>만성 유해성</u>	반복노출독성(구분1),
	사. 반복노출독성(구분1),	(사~차)	변이원성·발암성·생식독성(구분1)
	아. 변이원성(구분1)	<u>생태 유해성</u>	수생환경유해성 급성·만성(구분1)
	자. 발암성(구분1)	(마, 바)	
	차. 생식독성(구분1)		

□ 관리체계 개편방향(화학물질관리법령)

< 유해성 및 취급량에 따른 관리체계 개편 방향 >

화관법에 따른 관리형태(수단)	적용대상·수준 차등화 방향
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	유해성·취급량 고려 既 차등화
유해화학물질 영업자 관리	유해성·취급량 및 시설 유무 고려 → 차등화 <small>法개정 필요</small>
판매자 관리	
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기준 및 시설검사	유해성·취급량 고려 → 차등화 <small>法개정 필요</small>
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, 개인보호구 착용 등	유해성 고려 → 차등화 <small>法개정 필요</small>
화학물질 확인 통계조사 등 유통관리 및 화학사고 즉시신고	모든 화학물질에 적용 필요 → 현행 유지

- 유해성 : 화학물질의 독성 등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 고유의 성질
- 급성유해성 : 단기간 노출로도 인체에 즉시 영향을 줄 수 있는 급성경구독성, 급성경피독성, 급성흡입독성 및 피부부식성 등의 유해성
- 만성유해성 : 발암성, 생식독성, 변이원성, 반복노출독성 등 화학물질의 노출에 따른 인체영향이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유해성
- 생태유해성 : 수생생물(어류, 물벼룩, 조류 등)에 영향을 주는 유해성으로 급성·만성을 포함

- 피부 부식성 : 피부조직을 파괴하여 피부 괴사를 일으키는 유해성

(구분 1A) 3분 이하 노출 후 1시간 내에 부식반응을 일으키는 경우

(구분 1B) 3분 초과 1시간 이하 노출 후 14일 이내에 부식반응을 일으키는 경우

(구분 1C) 1시간 초과 4시간 이하 노출 후 14일 이내에 부식반응을 일으키는 경우

- 특정표적장기독성(1회 노출) : 1회 노출에 의해 신경계, 호흡기계, 조혈계, 심장 등 사람의 건강과 관련된 중대한 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성
- 유독물질: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물질

※ 유독물질의 지정기준

- ✓ 설치류에 대한 급성경구·경피·흡입독성(UN GHS기준의 구분1~구분3 해당)
- ✓ 피부 부식성/자극성(UN GHS기준의 구분1A에 해당)
- ✓ 어류, 물벼룩 또는 조류에 대한 급성·만성독성(UN GHS기준의 구분1에 해당)
- ✓ 반복노출독성, 변이원성, 발암성, 생식독성(각각 UN GHS기준의 구분1에 해당)